

일제강점기 부산도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차 철 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目 次

I. 머리말

II.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

1. 시가지변화

2. 항만매축

3. 도시빈민

III. 연구자료의 발굴현황

1. 문헌자료

2. 사진자료

IV. 맺음말-과제

I. 머리말

도시사 연구는 인간생활의 공간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근대이후의 도시는 전근대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배질서 즉 식민지라는 독특한 지배형태 속에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대도시는 일본인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일본인들의 생활환경에 따라 전혀 새로운 도시를 건설되든지, 아니면 전통 도시의 한 부분에 건설되기도 하였다.¹⁾ 근대 이후 일정한 공간에서 지니는 일본인 주도의 근대도시는 주변 전통마을을 이끄는 구심점이었다. 따라서 근대도시 분석은 근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부산 또한 전근대 도시 동래와 관련없이 새롭게 조성된 도시였다. 조선후기 설치된 초량왜관이 1876년 개항 이후 전관거류지로 활용되면서 도시형성이 시작된 것이다. 인구나 면적면에서 동래에 비교가 되지 않았던 부산은 점차 인근의 초량, 부산진, 나아가 동래의 서면, 심지어 동래읍까지 흡수하면서 전통도시 동래를 대체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이 과정은 근대가 전근대를 흡수하는 모습이고, 근대 요소가 지니는 흡입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부산이 지닌 도시문제의 원형은 식민지시대 형성된 근대도시 부산에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근

1) 橋谷 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11~12쪽.

대도시 부산의 형성과정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1960년대 김용욱, 김의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도시 연구는 거의 정체된 상태였다가 최근 식민지시대 일본인 사회의 다양한 분석의 한 과정으로 새로운 자료 발굴과 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본고는 그동안 진행된 주요 연구성과의 내용과 방향을 시가지변화, 항만매축, 도시빈민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구자료의 현황이다. 그동안 도시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문헌자료와 사진자료로 나누어 정리해 보려고 한다. 특히 사진자료는 최근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부산의 근대모습을 담은 자료집이 많이 출판되고 있어 도시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II.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

1. 시가지변화

개항 전 부산 일본인들의 주요 근거지는 용두산 주변 옛 초량왜관이었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산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이 증가하였다. 일본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공간부족을 초래하였다. 초량왜관 시절 공간은 오늘날 용두산공원과 국제시장을 아울러 약 10만평이었다. 당시로는 넓었지만, 개항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1901년 현재 거류지 박인 오늘날 대청동, 부평동, 보수동, 중앙동(당시 해안)지역으로 일본인들의 거주가 확대되고,²⁾ 1906년에는 토성동, 아미동, 초장동, 부민동, 대신동 등을 신시가지로 편입하였다.³⁾ 그리고 1902년부터 1905년 사이 북항 1기 매축이 끝나자 1905년 1월 24일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하였다.⁴⁾ 경부정(京釜町), 고도정(高島町), 안본정(岸本町), 중정(中町), 대창정(大倉町), 매립신정(埋立新町), 지정(池町), 좌등정(佐藤町) 등이다. 대부분 매축회사였던 부산매축회사 간부와 기사들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개항기 시가지 변화와 관련해서는 김용욱⁵⁾과 김의환의 초기 연구가 중요하다. 두 사람의 연구는 전관거류지 내 시가지가 변화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주로 『釜山府史原稿』를 활용해 일본인들이 거류지의 행정구역과 도로정비 내용을 정리하였다.⁶⁾ 한편 개항기 시가지 형성 과정을 분석한 김경남⁷⁾은 일본인들의 부산 진출과 토지소유 확대에 관심을 가졌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부산부제(釜山府制)가 실시되면서 기존 일본인 거류지 외, 인근 조선인 마을이 이곳으로 편입되었다. 오늘날 초량, 영주동, 영선동, 청학동, 동삼동, 범일동, 좌천동, 수정동, 부민동, 부평동, 대신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용두산 공원 주변이었던 일본인 마을은 인근

2) 金義煥, 『釜山近代都市形成史研究』, 研文出版社, 1973, 44쪽.

3) 『朝鮮之實業』제15호(1906. 9. 15), 35쪽.

4) 『조선일보』 1905. 1. 26(2)5.

5) 金容旭, 「釜山の 築港誌」 『港都釜山』 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3.

6) 부산의 거류지 설치와 관련해 손정목의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년도 중요한 연구성과이다. 이외에도 손정목의 많은 저서에 부산의 도시화 연구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7) 김경남, 『일제 하 조선에서의 도시건설과 자본가집단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조선인 마을로 확대되었다. 편입된 조선인 마을 즉, 부산진과 영도는 1917년 당시 이미 공장지구로 계획되었다.⁸⁾ 이런 계획은 1926년 이후 시작되는 대부산건설계획의 기본 골격을 이루었다. 식민지 지배가 한창이던 1936년 4월 1일부로 동래군 서면과 사하면 암남리(송도)가 부산부로 편입시켰다.⁹⁾ 그리고 1942년 10월 1일부로 동래출장소, 사하출장소, 수영출장소를 설치하여 동래군을 없애고 전부 부산부로 편입시켰다. 이리하여 부산의 한산한 어촌이었던 일본인 마을이 동래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조선인 중심지를 흡수하였다.

이러한 시가지의 확대 원인을 그동안의 연구는 인구증가와 공업화의 진행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연구는 김경남¹⁰⁾과 장선화¹¹⁾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경남은 1925년 진주에 있던 도청이 이전해 오고,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20년대 이후 인구증가와 공업화가 초래한 문제점을 보유한 채 도시화가 추진되었음을 강조한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화, 조선인의 빈민화 등을 초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희노동력을 배경으로 1930년대 이후 부산에는 노동집약적인 대공업이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은 초기 전관거류지 중심 공업화에서 범일정, 영선정 등 조선인이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공장의 설립과 설립지역의 집중화로 1930년대 공장 파업이 활발해지는 조건이 되었다고 한다.

8) 『부산일보』 1917. 7. 8(2)7

9) 『부산일보』 1936. 3. 6(1)9

10) 김경남, 「한말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성」 『지역과 역사』 제5호, 1999. 2.

11) 장선화, 「1920~30년대 부산의 공업발전과 도시구조의 변화」 『지역과 역사』 제6호, 2000. 4.

장선화 또한 공업화와 도시구조의 변화를 연결해 분석하였다. 즉 1910년대 후반 회사령 철폐로 부산공업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검토하였다. 1920, 30년대 부산에 설립되는 공업시설의 회사 수, 자본금 변화 등을 통해 부산 공업화의 발달을 전제 요인으로 보고, 이 공업화가 부산으로 도시 인구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이유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釜山府勢要覽』의 통계를 이용해 부산부 직업구성을 통해 조선인, 일본인들의 직업구성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도시구조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본인 상권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것은 시장의 증가와 연결시키고 있다. 시장은 대체로 당시 소비재 생산 공장부근에 위치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장씨는 부산의 식민지시대 도시화 과정을 공업화와 연결시켜 언급했다는 점에서 아주 이상적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위 두 연구자들의 공업화와 도시화의 연결에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가. 위 논자들의 검토대로라면 부산으로 집중하는 조선인들을 부산에서 설립된 공장들이 유인했다는 논리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공업화와 조선인들의 유입은 근대도시 부산으로 성장하는데서 식민지성을 찾는데 어렵게 만든다. 橋谷 弘¹²⁾은 인구는 도시 공업이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산미증식계획으로 농촌에서 쫓겨 밀려난 존재들로 도시에서 제대로 고용되지 못하고, 잡업층으로 체류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농촌의 몰락에 이들 유희노동자의 부산 유입 원인을 찾는 것이다. 물론 부산 공업화가 그 하나의 원인이기기는 하겠지만, 농촌 농민들의 몰락도 강조되어야만 식민지적 원인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12) 橋谷 弘, 앞의 책, 2004, 53~54쪽.

부산 인구증가의 원인을 1920년대 공업화 이외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 차철욱¹³⁾은 1900년대부터 시작된 부산의 대토목공사 즉 항만매축공사가 많은 노동력의 집중을 부른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씨는 1910년대 이후 부산의 토목공사 원가표를 통해 재료비보다 인건비 구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고, 또 조선인 직업별 구성에서 유업자 혹은 기타유업자로 분류된 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인식, 이들이 대부분 항만 매축노동자로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인구 증가는 조선인 쪽이 훨씬 많았고, 이에 따라 조선인 거주지역에 대한 市區改正이 1921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공사는 도로확장 및 연장, 암거 혹은 교량건설이 주요 목적이었다. 초량정, 수정정, 좌천정, 범일정, 대신정, 영선정 등 조선인 거주지구가 대상이었다.¹⁴⁾ 시구개정이 1921년부터 7개년 계속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진행경과를 정리한 연구는 김용욱과 김의환이다. 김용욱은 「釜山市區改正工事精算調書」를 이용하였고, 김의환은 『관보』를 활용해 1943년까지 진행된 시구개정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구개정과 관련해 장선화는 조선인 거주지역이 시구개정의 대상이었음은 공업시설의 필요성 증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도시구조의 변화에 항만시설공사, 교통시설의 변화,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도시화 과정은 일본인 부자들의 투자가 확산되면서 조선인 소유자들의 몰락, 이입 인구들의 빈민화 등을 초래했다고 한다.¹⁵⁾

13) 차철욱, 「부산항의 역사와 현재-조선총독부의 부산항만 설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문화학회 제7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15~16쪽.

14) 釜山府, 『釜山府稅要覽』, 1934, 135~143쪽.

시가지 정비사업은 1926년 대부산건설 이후 체계를 갖춘다. 1931년 대부산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산간선도로(도진교) 및 선류(船溜)정리공사’로 부산역전, 대창정(大倉町), 장수통(長手通), 남빈정(南濱町) 일대의 도로망이 변화하였다.¹⁶⁾ 기존 부산역 앞 도로는 부산우편국 앞으로 꺾여 부산 시내로 들어갔으나, 이 공사로 부산역전에서 곧바로 부산대교 앞으로 연결되었다. 이 도로 부지를 얻기 위해 북항매축지의 일부와 어항을 매축하고 주변 부지를 매입해 폭 27미터, 총 길이 1,523m의 간선도로, 선류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였다.¹⁷⁾ 이 도로망은 1934년 11월 23일 부산대교 준공식과 함께 완공되었다.

그리고 시가지계획에 관련된 논의가 많아진다. 이 시기 구체적인 시가지 계획에 관련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경남은 1934년 6월 시행되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1937년 1월 9일 수립된 부산부 시가지계획안을 검토하였다.¹⁸⁾ 조선총독부관리가 1934년부터 1942년까지 작성한 공문서철인 『釜山都市計劃決定』을 주로 분석하였다. 부산시가지계획의 목표는 전시기 부산을 병참기지로 조성한다는 것과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계획은 시가지구역, 가로망, 녹지·풍치·공원 조성이 기본내용이었다. 시가지구역의 대상은 주로 동래의 서면, 남면이 중심지로 조선인 거주지였다. 이 구

15) 장선화, 앞의 논문, 2000.

16) 『부산일보』 1932. 4. 20(1)1

17) 『朝鮮と建築』제14집 1호(1935. 1. 1), 47쪽.

18) 김경남, 「일제말 전시체제기 부산 시가지계획의 전개와 그 특질」『지역과 역사』제20호, 2007. 4.

역은 일본인 거주지의 확대에 따른 제2 부도심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가로망 조성은 범일정, 대연리, 감만리, 전포리가 중요 대상이었다. 25~35m의 대로가 계획되었다. 이 계획은 적기지구의 공장과 군수창고와 연결, 조선방직 부근, 송도의 군 방공시설, 영도 영선정의 군사시설과 연결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다. 녹지지구의 조성은 전시 대도시 공습 때 피난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직격탄의 명중률 방해를 위해 결정된 내용이었다. 이 계획은 재정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계획에 대한 검토이지 실제 부산의 시가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계획의 내용은 이미 1930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가 정리한 『釜山都市計劃書』에 기본 골격이 정리되어 있다. 이 계획서는 도시계획구역, 지역, 교통, 항만설비, 위생 시설 등 크게 4개항목을 설정하였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대상지역, 지역에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의 문제를, 교통에서는 도로폭과 전차, 철도 등의 문제를, 항만설비에서는 매축과 연안정리를, 위생시설에서는 공원, 상수도, 하수도 문제를 각각 정리함으로써, 김경남이 정리한 부산시가지 계획안의 중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가지 계획의 기본골격은 꾸준히 준비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1930년대 정세와 결합해 좀더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산시가지계획과 시가지 변화와 관련한 더 많은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항만매축

일본인들은 용두산 주변의 거류지에서 생활공간을 확대하고, 또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축을 추진하였다. 부산항만 매축은 부산북항, 영선산착평공사, 부산진, 부산남항, 영도 대풍포, 적기만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다. 부산항 매축은 부산항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비하면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항만매축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용욱과 김의환의 초기 연구가 위 매축의 대강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북항 매축의 경우 동래감리와 외부대신 사이의 보고, 훈령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착평공사의 경우도 동래감리보고 등 한국정부측 자료와 거류지 일본인들이 발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 연구성과에서는 사업의 경위와 공사내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일본측에서 발굴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류교열은¹⁹⁾ 『近衛篤磨日記(別卷)』과 『慶尙道事情』 등 그동안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던 자료를 이용해 북항매축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했다. 류교열은 『近衛篤磨日記(別卷)』에 언급된 佐藤潤象, 高島義恭의 북항매축권 획득과정을 정리하였다. 매축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일본의 외무상 青木周藏을 비롯한 관련 외교관들 사이에 전개된 일본정부의 개입과정, 부산항 거류민단, 경부철도회사 등과의 논의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업실행과정은 『慶尙道事情』에 포함된 부산매축주식회사 설립과정, 시공업체에 의한 공사준비과정 및 공사내용 등을 언급하였다. 그동안 북항 매축권 확보과정

19) 柳敎烈, 「釜山 日本人專管居留地와 北浜埋築에 關하여」 『日語日文學』 제17집, 大韓日語日文學會, 2002. 5.

에 일본의 외교관계 관료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매축권획득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거류민단측과 경부철도주식회사와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매축권획득과정에서 일어나는 각기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매축이 지니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케하는데 중요하다. 즉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볼 경우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거대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였다.

일본정부가 부산의 자본이 약한 거류민단보다 일본의 대자본과 결합할 수 있는 인물들을 지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은 차철욱 연구이다.²⁰⁾ 차철욱은 일본 외무성이 소장한 『釜山海岸埋立工事ノ一件』이라는 문서철에 포함된 일본 외무대신, 서울의 일본공사, 부산의 영사 사이에 왕래한 문서를 분석해 佐藤潤象, 高島義恭 등이 매축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좀더 치밀하게 분석했다. 동시에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단과 경부철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매축과 관련한 이해관계도 분석함으로써 매축의 과정을 단순히 일본 전체의 이익 실현이라는 단순논리보다 각 집단의 이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지도 분석했다. 차씨는 나아가 매축지에 등장한 시설 즉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의 추이를 통해 매축이 지닌 일본의 국가적 이해관계, 각 민간자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접근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동경경제대학이 소장한 『釜山埋築會社』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매축이 일본의 대륙진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점도 존재했지만, 이를 둘러

20) 차철욱, 「부산 북항 매축과 시가지 형성」『한국민족문화』제28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10.

싼 매축회사와 부산거류민단 사이의 충돌도 확인했다. 이 내용은 부산에서 발행되던 『부산일보』와 『조선시보』를 활용하였다. 매축지 내 船溜 주변 도로문제, 돌출부 매수문제, 간선도로 확장 문제, 지세부과문제 등에서 거류민단에 제공하는 매축지 규모를 둘러싼 갈등도 적지않았음을 밝혔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차철욱은 매축이 지니는 근대성 뿐만 아니라 매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도 매축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매축이 지니는 근대성과 함께 식민지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논리는 차철욱의 부산진 매축관련 논문에서 계속되었다.²¹⁾ 부산진매축 관련 논문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釜山鎭海面埋立件』과 『釜山鎭海面埋立紛爭關係』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이미 김경남이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²²⁾

차철욱은 이 논문에서 1900년 전후 부산의 조선인 중심으로 동래감리로부터 부산진 지역에 매축권을 확보하려는 열기가 강했다는 전제아래 이들은 주로 1902년~1905년 사이 재력가들에게 매축권을 넘겼음을 확인하였다. 차철욱은 이후 매축권의 이동과정을 분석했고, 특히 최후로 매축권을 획득한 杉山茂丸가 당시 통감이나 일본 정부측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임에 주목해, 식민지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식민지성과 매축이라는 근대성은 최종 시공회사였던 조선기

21) 차철욱, 「1910년대 부산진 매축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제20호, 부경역사연구소, 2007. 4.

22) 김경남, 『일제 하 조선에서의 도시건설과 자본가집단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경남은 부산의 일본인들이 부산진 해변침탈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서 활용했을 뿐 부산진 매축과 크게 관련은 없었다.

업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부산진 매축이 지니는 근대성과 식민지성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3. 도시빈민

도시계획 혹은 시구개정은 부산의 인구증가와 관련해 추진되었다. 인구증가로 부산에서는 주거문제, 빈민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인구증가가 도시계획을 서두르게하는 원인이기도 했지만 도시계획은 새로운 도시문제 즉 주거문제나 빈민문제를 초래했다. 부산의 도시화가 근대도시건설이라는 근대화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도 동시에 생산했다. 이와 관련해 접근한 연구가 하명화,²³⁾ 박철규,²⁴⁾ 양미숙²⁵⁾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명화는 1920년대 농촌의 몰락으로 도시에 몰려든 농민들은 도에서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빠졌고, 이들의 주거조건은 아주 열악했는데, 그 이유가 일제의 부동산자본가 위주의 토지정책에 따른 주택지의 소유집중, 대가경영의 활성화 등으로 가옥이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도시빈민들은 열악한 경우 걸인이 되거나 조금 나으면 토막, 토굴 생활을 주로했다. 이보다 형편이 나은 경우에는 남의 집을 빌리는 借家생활을 했으나, 소유

23) 하명화, 「1920~30년대 초 도시 주거문제와 주거권 확보운동」『지역과 역사』 제12호, 2003. 6.

24) 박철규, 「1920~1930년대 부산지역 빈민의 추이와 생활」『항도부산』제15호, 1998. 12.

25) 양미숙, 「1920~1930년대 부산부의 도시빈민층 실태와 그 문제」『지역과 역사』 제19호, 2006. 10

자들로부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부산주택난구제기성회와 차가인동맹을 분석하였다. 1920년대 말 경제공황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주택난이 더욱 심해재자 주거권 확보를 위해 부산의 조선인 자본가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주택난구제기성회를 조직되었으나, 일본인이 주도하는 사업에 흡수되었다고 한다. 1920년대초 조직되는 차가인동맹은 도시 주민 스스로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집세인하, 이사 때 유예기간 확보 등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주민들의 주거권 확보운동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제로하여금 부영주택건설, 소주택건설사업, 차가법제정 의향 등 문제해결자세를 보이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철규는 주로 부산 빈민층의 실태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부산으로 빈민이 집중한 이유로 부산 인근 및 경남지역의 자연재해를 들고 있다. 1922년 양산의 홍수, 1929년 경남의 한해 등 자연재해가 부산으로 빈민이 집중하는 원인으로 분석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미있는 해석이다. 하지만 재해가 있었던 시기에 부산의 빈민증가와 상관관계가 전혀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재해가 없던 시기 농촌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제의 농업 및 농촌정책, 부산의 공업화와 관련해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특정 신문만을 자료로 활용해 폭넓은 자료정리 및 해석이 아쉽다. 이런 자료문제를 어느정도 극복하면서 부산의 빈민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양미숙의 성과이다.

양미숙은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던 신문 외 부산에서 발행

되던 『부산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해 부산부에서 발행된 기관지인 『釜山』 등을 이용해 빈민문제에 접근했다. 양미숙은 도시빈민층의 현황, 도시빈민의 직업과 소득, 가옥형태와 주거환경, 부산부의 도시빈민 대책 등을 분석했다. 그는 부산 빈민들의 주거환경을 일본인과 차별적인 저임금의 고용구조와 관련시켰다. 부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주로 日雇였고, 이들의 고용상태는 노동력 과잉으로 인해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일본인 노동자의 50~70% 정도의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주거지와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부산부의 활동은 형식적이었고, 심지어 식민지 정책의 선전수단화했다고 본다.

III. 연구자료의 발굴현황

1. 문헌자료

부산의 도시화와 관련한 문헌자료는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초기 김용욱, 김의환 등의 연구자들은 동래감리와 조선정부 사이에 왕래한 보고와 훈령, 일본측 자료인 『부산부사원고』 등을 활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부산시민도서관이 소장한 『부산부세요람』 등 부산부 발행 자료가 많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부산부 발행자료는 개략적인 내용만 정리되었을 뿐 도시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도시화와 관련해 처음 자료를 정리 공개한 것이 1962년 발행된 『항도부산』 제1호이다. 여기에는 부산과 관련해 기본적인

으로 중요한 전근대와 근대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남항매축관계자료」를 정리했다.²⁶⁾ 이 자료는 부산부가 발행한 잡지 『釜山』의 제4권 제7호의 내용을 번역한 수준이다. 자료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매축관련자료를 『항도부산』제1호에 게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산의 근대도시화 과정에서 매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가 적지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변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 수집과 이를 분석한 연구가 최근 진행되었다. 김경남, 차철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부산부와 총독부 사이에 왕래한 공문서, 일본 외무성사료관이 소장한 일본인 외무관료들 사이에 논의되었던 자료, 동경경제대학이 소장한 북항매축을 담당한 부산매축회사 보고자료 등이 발굴되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부산 도시변화의 새로운 내용이 보충되었다. 새로운 자료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항도부산』에 일부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먼저 김경남²⁷⁾은 1930년대 부산의 도시계획 결정과정 및 그 내용과 관련한 공문서를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소장으로 71철 354건이라 하는데, 이 기록 가운데 『부산도시계획결정』과 총독부 청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가지계획위원회관계철』부산시가지계획의 기안 및 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부의 예산관련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김씨는 공문서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가 지니는 사료

26) 「釜山南港埋築關係資料」『港都釜山』제1호, 1962. 12.

27) 김경남,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시가지계획에 관한 공문서」『항도부산』제21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9.

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차철욱²⁸⁾은 일본 외무성사료관 소장 『釜山海岸埋立工事ノ一件』과 동경경제대학 소장 『釜山埋築會社』 자료를 소개하였다. 모두 북항매축과 관련한 자료이다. 외무성 자료는 일본 외무대신과 서울의 林權助公使, 부산의 영사 사이에 왕래한 문서이다. 이 내용은 당시 매축회사 발기인이었던 高島義恭 등이 매축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조선정부, 부산의 일본인거류민단, 경부철도주식회사 등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하다. 북항 매축이 매축권자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경경제대학 소장 자료는 大倉商事가 소장한 자료가 이곳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 회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政商이었던 大倉喜八郎이 설립한 회사이다. 大倉喜八郎은 부산 북항매축을 담당한 釜山埋築株式會社 사장이었고, 실제 시공을 맡은 大倉組 또한 자신의 회사였다. 따라서 자신이 세운 학교인 동경경제대학에서 이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매축과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과 매축 완성 이후 매축지 매매와 관련한 서류, 부산 일본인 거류민단과 회사의 갈등 등 매축 준공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노기영²⁹⁾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묘가다니(茗荷谷)문서 중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자료에 포함된 적

28) 차철욱, 「대한제국기 부산 북항 매축관련 자료의 내용과 성격」 『항도부산』 제22호, 2006. 9.

29) 노기영, 「日帝末 釜山 赤崎灣의 埋立과 臨港鐵道 建設事業」 『항도부산』 제22호, 2006. 9.

기만 매립 및 임항철도건설사업의 실태를 정리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적기만 매립은 1934년 조선의 매축왕으로 불리던 이케다(池田佐忠)가 시작했으나, 1935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가 공사비를 투자하고 이익금을 배당받기로 하고 참여하였다. 이후 이케다는 제외되고 동척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매립을 완료하였다. 「적기만매립사업」 문서는 매립사업의 연혁, 현황, 투자상황, 수지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척의 부산임항철도주식회사관련 자료를 소개하여 사업의 개요와 회사의 자본 증자이유, 증자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적기만 매립과 부산진역과 적기만을 연결하는 임항철도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진자료

무엇보다 부산의 도시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진이나 영상 등 시각자료이다. 현재 부산의 역사와 관련해 발행된 사진자료는 적지않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직할시, 『개항백년』, 1976.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의 상공업 백년』, 1989.

동래구청, 『사진으로 본 동래백년』, 1995.

부산광역시 서구청, 『서구의 어제와 오늘』, 19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진으로 보는 해운대백년사』, 1996.

부산광역시 중구청, 『부산개항 121년과 함께 사진으로 보는 중구 반세기』, 1997.

한국사진작가협회, 『광복 50주년 기념 사진으로 본 부산 50년』, 1995.

현대백화점 부산점, 『부산의 옛모습전』, 1995.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2003.

이들 사진집은 부산의 근대와 시가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개항 후 일본인들이 집중했던 용두산 주변의 시가지, 관공서, 경제관계 건물, 관광지 등 당시 발행되었던 엽서들을 중심으로 수록했다. 하지만 이들 자료는 단순한 시각자료일 뿐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사적인 내용이 함께되지 못했다. 수록된 사진이나 엽서의 간단한 설명이 첨부되기는 했지만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벗어 보고자 최근 자료의 해석에 실증적인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자료집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항변천사』, 2003.

김재승 편저, 『記錄寫眞으로 보는 釜山·釜山港130年』, 부산광역시 중구 2005.

김재승편저, 『우리들 기억 속의 영도다리 사진첩』, 한국해양대학교 박물관, 2007.

부산박물관,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2007.

이들 자료는 제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물론 시기, 장소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해 시각자료를 역사자료로서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특히 『記錄寫眞으로 보는 釜山·釜山港130年』에는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용두산 주변의 옛 왜관 건물이나 도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

진이 실려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우리들 기억 속의 영도다리 사진첩』은 영도다리라는 특정 소재를 한권의 자료집으로 출판했다는 점에서 종전의 많은 소재를 다루던 것과 비교하면 새로운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당시 부산부가 영도다리 준공을 기념해 발행한 『부산대교 기타공사 준공기념사진첩』(1935년 4월)을 기본으로 하면서 영도다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진자료와 설계도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1935년 부산 간선도로와 남항축조공사 준공도’는 영도다리의 준공과 함께 부산역전에서 옛 부산시청까지 간선도로와 주변의 부산항 매립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는 그동안 발행되었던 사진자료집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 또 이 자료집의 특징은 동일에 대해 시대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사진자료의 정확한 해설을 위해 다양한 자료집은 물론 당시 발행되었던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설을 추가해 사료적인 가치를 높였다. 한편 그동안 발행되었던 자료집에서 잘못 해설한 부분도 많이 수정해 부산 도시 변화에 정확성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들 사진자료 외에도 시가지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 도시계획 도면 등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부산박물관이나 부산근대역사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전시하고 있다. 부산박물관의 『釜山案内圖』(1939년), 부산근대역사관의 『浦山港見取圖』(1881년), 『釜山府市街圖』(1936년), ‘부산시가지계획도’ 등은 부산시가지 변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IV. 맺음말 - 앞으로 과제

이상에서 부산도시사 연구와 관련한 연구성과와 관련자료의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관련해 몇 가지 언급하려고 한다.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식민지 도시의 원형이 아직도 복원조차 되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부산의 시가지가 변화하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단편적인 소재를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산 전체 시가지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많다.

도시화의 진행과 공간배치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관공서, 경제기구 등의 배치와 관련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깊이있는 분석이 아니다. 식민지배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도시 내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빈민 연구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근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조선인, 아니면 직업별로 존재하던 인간의 생활을 도시화와 관련지워 분석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도시사 연구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이후 동래와 부산의 위상이 바뀐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근대도시가 전근대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흡수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의 의미나 과정을 이해하는 필요한 분석이다. 도시의 변화는 그 공간에서 살았던 인간의 의식이 함께 변화한다고 볼 때 전통도시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근대를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의

미있는 작업이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자료의 정리와 체계화 작업이다. 그동안 개인 연구에 머물렀고, 사용 자료 또한 공개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자료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국가기록원이나 한국관련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이나 자료실에서 수집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연구자가 필요에 의해 수집 정리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에서 자료수집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